

#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비 28억 반영...장성 설립 확정

## 국회 "질병청은 전남도와 협의해 사업 추진하라" 명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비 28억원이 국회가 지난 3일 처리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면서 사업 대상지를 두고 최근 벌어졌던 논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 확보뿐 아니라 정부예산서 부대의견에 '질병관리청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시 전남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국회가 사실상 센터 설립 대상지를 장성으로 못 박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5일 전남도와 지역정기권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비

28억원이 반영됐다. 부지매입비 23억원, 공사비 5억원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질병관리청이 신청한 관련 사업비 5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지매입비 23억원이 증액됐다. 국회가 처리한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전남도와 협의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자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 산 확보 성과를 설명하면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서 광주-전남 상생공약인 당초 계획

대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장성 나노산단에 센터 설립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자료를 내고 "우리 전남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부지매입비 28억원을 국회에서 증액하고 '전남과 협력하여 수행'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장성나노산단의 입지를 국회에서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로써 사업예정지나 시설 규모 등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국민 사망원인 2위(24.3%)에 이른 심뇌혈관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설 구축 사업이다. 구축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향후 경기도 일산에 설립·운영 중인 국립암센터 못지않은 국가 의료 중추시설이 될 것이라고 지역의료계는 전망한다.

지역의료계가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와 관련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 반드시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줄곧 내온 이유다.

당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 일원 2만3000㎡에 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질병청은 올 10월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1500억원, 부지 면적을 3만8000㎡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질병청이 시설 및 조직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당초 2021년 예산에 반영된 부지매입비 등 센터 설립비 44억원을 불용처리할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시설·조직 확대와는 별개로 올해 예산으로 장성에 위치한 사업부지를 우선 사들이라는 전남도와 장성군, 지역 정치권 목소리를 질병청이 외면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주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등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질병청이 직원 정주 여건 등을 핑계로 센터 입지를 전남 이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핍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난 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금법'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법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법 성공 정착 머리 맞대다

### 시·군, 농어민단체 등과 토론회 정책 제언 등 의견 모아

전남도가 시·군, 농어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도청 왕인실에서 시·군, 농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2023년부터 시행할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경과와 해외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 정착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법 해설을 시작으로, 영명배 충남대 교수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쟁점과 정책제언',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박사의 '해외사례(일본 고향납세) 분석과 시사점' 등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과부영 사무관은 법 논의를 시작한 2007년 이후 국회 발의 등을 거쳐 제정이 되기까지의 진행과정과 도입 취지 및 배경, 법 조항 등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10월 공포됐으며,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액의 30%범위 내에서 담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 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엄 교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위주로, 전남도의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엄 교수는 "전남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매력적인 지역특산물이 많다는 강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지방경영전략으로 플래이스 마케팅, 지역브랜드, 고객관리 등을 강조했다.

홍 박사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중심으로 도입 초기의 시행 착오 및 지역 특산물 다양화로 성공한 사례 등을 아울러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다른 제도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 할 수 있는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담례품 제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역특산물 판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모집된 기부금에 대한 사용방법,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서도 의견을 나눴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전남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담례품 준비 등과 함께 전남도민사랑증 제도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영암 산관계농장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영암 삼호 산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나왔다. 전남도는 5일 "영암군 삼호읍 산관계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환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장주의 폐사 신고에 따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에서 확인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2-5일 후 나올 예정이라고 전남도는 덧붙였다.

전남도는 의심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도내 전 가금농장에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도 현장지원관을 현장에 긴급히 파견해 역학조사를 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농장 산관계 3만6000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있다. 또한 검

출농장 반경 10km는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 통제 및 집중소독을 하고, 역학 관련 농장과 시설은 이동제한을 한다. 방역대 3km 내는 가금 사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도내 전체 산관계 농장 87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합동으로 10일까지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장 소독, 환적장·상차장소 방역관리,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저장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5일 현재 올가을 들어 가금농장 4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육용오리 3곳(나주 2곳, 담양 1곳), 종오리 1곳(강진) 등 모두 오리농장이다.

/김형호 기자 khh@

## 전남 출연기관 내년 사업, 차기 국정과제 연계 초점

전남도 산하 공사·출연기관이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도가 마련한 정책과제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2022년 주요사업을 이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도청 서재발실에서 전남개발공사 등 도 산하 18개 공사·출연기관이 모여 김영록 지사 주재로 '전라남도 공공기관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성과를 살피고, '차기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남발전 정책과제'와 연계한 2022년 기관별 업무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관별 전남발전 정책과제 주요 연계 사업은 ▲전남개발공사·녹색에너지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의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전남테크노파크·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탄소중립 화이트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디자인진흥원 신입 원장에 송진희 교수

광주시는 "지난 3일 송진희 호남대학교 교수를 3년 임기 광주디자인진흥원 제7대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1989년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대통령 직속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위원장, 2019 아시아-유럽 창의 혁신도시연대 정상회의 총감독, 친환경 디자인협회 회장, 광주국제디자인총회 실행위원, 광주디자인진흥원 이사 등을 거쳤다.



명이다.

특히 디자인 전문가로서 광주디자인진흥원 이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광주시 혁신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광주디자인진흥원의 경영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

/박진표 기자 lucky@

손해보험협회

##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